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

| 2020 하반기 |

오늘의 세계경제

세계경제 포커스

KIEP 기초자료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례 contents

발간일	제목	저자	
2020.07.02.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김홍원	01
2020.07.07.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양평섭	02
2020.07.09.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 주요 내용과 전망	최재희	03
2020.07.13.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조동희 외	04
2020.07.17.	몽골 축산물가공업 육성 동향과 한·몽 협력 과제	정동연	05
2020.08.04.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장영욱 외	06
2020.08.0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강문수 외	07
2020.08.11.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태현	08
2020.08.19.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 방향과 시사점	안성배 외	09
2020.08.21.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연원호	10
2020.08.24.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 ODA 정책과제	정지선 외	11
2020.08.28.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과 시사점	민지영	12
2020.08.31.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문진영 외	13
2020.09.10.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연원호	14
2020.09.11.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강구상 외	15
2020.09.15.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정동연 외	16
2020.09.18.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김승현	17
2020.09.21.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및 시사점	박나연	18
2020.09.23.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이재호	19
2020.09.25.	비시장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의 배경과 시사점	강민지	20
2020.09.28.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정형곤	21
2020.09.29.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장영욱 외	22
2020.10.19.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진교	23
2020.10.20.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민숙 외	24
2020.10.22.	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한국과의 협력 과제	강문수	25
2020.10.29.	멕시코의 에너지정책 논쟁 및 시사점	김진오 외	26
2020.11.06.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강구상	27
2020.11.12.	2021년 세계경제 전망	안성배 외	28
2020.11.26.	EU의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이현진	29
2020.12.02.	중국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현상백 외	30
2020.12.11.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시사점	장영욱	31
2020.12.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수현 외	32
2020.12.14.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장영신 외	33
2020.12.14.	세계 파생상품 시장 현황 및 최근 한국의 이슈	김유리 외	34
2020.12.24.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정영식 외	35
2020.12.28.	중국의 대북관광 동향과 시사점	이정균	36
2020.12.30.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선형 외	37
2020.12.31.	EU·영국 간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동희 외	38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김홍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044-414-1278)

- ◎ 2020년은 중국정부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최근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음.
 -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하이난 섬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하이난 경제특구 설립 30주년이었던 2018년,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홍콩과 유사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 중국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에 무역, 투자, 금융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포함하였고,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춤.
 - [무역]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후 「관세부와 수입상품 리스트」,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투자]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조치 이외에 하이난에 별도로 적용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차후 마련될 예정임.
 - [금융] 외환거래 규제 완화는 기존에 시행되던 자유무역계좌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형태의 역외 투자 및 해외 채무 관리, 선도적인 금융업 개방 확대에 대한 구상은 초기 단계에 그침.
 - [특화산업] 관광과 연계된 서비스업 및 부존자원을 활용한 해양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자유무역항으로 조성할 계획임.
-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일부 홍콩과 같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홍콩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후속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함.
 - 수입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폐지,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관련 세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현시점에서 파악된 바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향후 중계무역 기능을 겸비한 의료관광특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물류·금융·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
 -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은 앞으로 30여 년이 소요되는 장기 정책사업으로, 관련 세부 정책이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 전망을 가늠하기에는 이룸.
 - 다만 면세구매 제한 완화,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관광업이 우선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 완화 및 세율 인하 이외에 다년간 유무형의 관련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044-414-1121)

- ◎ 2019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의 점유율도 급락함.
 - 대중국 수출은 2019년 16.0% 감소에 이어 금년 1~5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9.4% 감소
 - 2019년 대중국 수출 감소는 중간재, 특히 메모리반도체를 비롯한 10대 대중국 수출상품의 부진에 기인함.
 - ※ 2019년 대중국 수출액 감소의 62.7%가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15.2%는 메모리반도체 이외의 첨단제품(High-tech) 수출 감소에 기인함.
-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대중국 수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수출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ICT 및 첨단산업 등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부진과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자동차부품과 휴대폰부품 수출 둔화로 이어짐.
 - 이 외에도 미·중 관세전쟁으로 기대되었던 우리 수출상품으로의 전환효과가 미약했으며, 한·중 FTA도 대중국 수출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제한적 역할에 그침.
- ◎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ICT 분야에서 아세안(ASEAN) 및 대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신성장 산업분야에서는 EU와 일본 등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함.
 - 전자부품 분야에서 대만 및 ASEAN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서 ASEAN의 점유율 상승세가 나타남.
 - 중국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바이오, 생명과학,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EU가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경쟁력을 보유함.
-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국 수출 둔화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에 따른 대체 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공급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2020년도 대중국 수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재 수출 둔화, 미·중 1차 무역협상 합의에 근거한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China Shopping List)로 우리 수출품이 대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 10대 수출상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상품 구조를 벗어나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신산업(비메모리,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한국의 공급능력을 강화해야 함.
 - 한·중 FTA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jhchoi@kiep.go.kr, 044-414-1098)

- ◎ 2020년 5월 17일 중국정부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부양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연계발전을 위한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을 발표함.
 - 중국은 서부지역의 내수 증진, 주민 생활수준 제고, 대외개방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번 정책은 2010년 발표된 「서부대개발 전략 심화 실시의견」 대비 환경보호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광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 ◎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은 서부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기초인프라 건설, 에너지 공급구조 최적화, 신산업 발전, 생태·환경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부양 및 주민 생활수준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번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구축사업의 우선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쓰촨(四川)-티벳(西藏) 구간, 충칭(重慶)-쿤밍(昆明) 구간 및 양쯔강 연안의 고속철 연결과 대규모 공항 및 항만 건설 등의 계획을 제시함.
 - 또한 중국은 충칭시와 쓰촨성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광, 전자상거래, 물류업 등 신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이번 정책은 특히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및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확대를 강조함.
- ◎ 중국은 서부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ASEAN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중앙아시아와 접경한 신장(新疆)자치구, 동남아로 통하는 광시(廣西)자치구, 윈난(雲南)성 등 접경지역을 일대일로 협력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
 - 충칭, 쓰촨, 샨시(陝西)를 내륙 개방의 허브로 육성하고 청위경제권(成渝經濟圈) 건설을 가속화하며, 서부 역내 자유무역시험구(FTZ) 및 종합보세구를 증설할 계획
 - 서부지역의 유일한 항구인 광시 북부만(北部灣)을 본격 육성하여 서부지역의 해양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 중국은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심화 추진을 위해 서부지역을 적극 활용할 전망
 - 중국은 서부지역의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며, 이번 정책이 서부지역의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만큼 환경 관리, 휴양 관광,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사업 기회가 증대될 전망
 -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적 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ASEAN,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부지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 (dhjoe@kiep.go.kr, 044-414-1123)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jiyoon@kiep.go.kr, 044-414-1064)

- ◎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영국정부는 포스트 브렉시트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 중
- ◎ 영국정부는 브렉시트 후 3년 내에 영국 무역의 80%가 FTA의 적용을 받게 한다는 목표로 비EU 국가와의 무역관계 강화를 예고
- ◎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 무역의 52%를 차지하는 비EU 국가와의 통상관계가 크게 변화
 - 브렉시트에 따라 EU가 76개 역외국과 체결한 43개 무역협정에서 영국이 자동으로 이탈하게 되어, 이들 국가와 무역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FTA 추진이 필요
 - 기존에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없었던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와 신규 FTA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여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
 - 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기 종료와 함께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고, 영국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존 EU의 공동역외관세(CET)를 대체할 관세체계가 필요
- ◎ 영국정부는 △48개국과 대체 무역협정 체결 △FTA 우선협상 대상국과 무역협정 개시 △영국산업구조에 맞춘 영국대세계관세(UKGT) 발표 등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비 중
 - 영국은 기존에 EU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48개국과 무역 지속협정을 체결하였고, 19개 국가와 현재 협상 중
 - 미국과는 5월에 FTA 협상을 시작하였고, 호주·뉴질랜드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6월 중 FTA 협상을 개시
 - 일본과의 무역협정은 현재 단계적 발효 중인 EU-일본 EPA를 기반으로 추진 중
 - 기타 MFN 관세 적용 국가와의 교역에 대비하여 영국정부는 자국의 소비와 산업 패턴에 맞추어 기존 EU 공동역외 관세(CET)보다 자유화된 UKGT를 발표(평균세율 5.7%, 영세율 품목 47%)
- ◎ 영국의 비EU 국가 대상 통상정책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는 유럽 의존도와 원산지기준 변경 등으로 자율성에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
 - EU 및 EU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EU 유럽 국가(노르웨이, 스위스 등)가 영국의 통상관계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
 - 미국과의 FTA 협상은 보건 및 소비자 안전이 직결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난항 중
 - 또한 FTA 체결 후에도 브렉시트에 따른 원산지기준 적용 변경으로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 한국과 영국은 2019년 8월 대체 FTA를 체결하여 무역 연속성을 확보하였지만, 양자 교역에서 EU 부분품의 역내산 인정문제 및 영국과 일본의 FTA 협상 결과 등에 의한 영향은 불가피



몽골 축산물가공업 육성 동향과 한·몽 협력 과제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 ◎ 몽골은 원자재 의존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축산물과 광물자원의 단순가공에 그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
 - 축산물가공업을 경공업 분야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국내 가공 비중 및 가공 수준이 낮음.
 - 몽골은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입대체화 및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선진 인프라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자본, 경험, 기술력을 갖춘 제3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 최근 우리 정부는 한·몽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북방지역의 넓은 배후시장을 활용한 경제협력, 중소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몽골 협력전략을 새롭게 발표
 - 그동안 한·몽 협력은 교역을 중심으로 투자 진출이 미미했으나, 우리 정부는 동부권 거점 협력 국가로 몽골을 선정하고 맞춤형 협력 모델을 발굴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계획임.
 - 그 일환으로 몽골의 제조업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에 부응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 한편 중국은 육류 등 식품가공 부문에서, 이탈리아는 캐시미어 섬유가공 부문에서 각국의 강점과 역량을 활용해 몽골과 경제협력을 확대
 - 중국은 몽골 육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검역을 지원하고, 자본 및 기술력을 활용해 몽골 내 육류가공 공장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몽골 캐시미어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몽골에 ‘섬유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첨단 설비 및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유부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일본은 몽골의 최대 원조공여국으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민간기업간 네트워킹 형성 등 비즈니스 협력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 축산물가공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한국과 몽골의 정책적 수요가 일치해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한국과 몽골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신규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한국의 강점 및 상호 협력 수요를 고려한 차별적인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1.5트랙 협의체 운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협력, 인재양성 지원, 수의협력 등을 통해 민간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음.
 - 몽골은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EU와는 GSP 플러스를 통해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미국은 몽골 캐시미어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어,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협력 증진방안 모색이 적극 요구됨.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전략과 경제적 영향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044-414-1221)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gyoon@kiep.go.kr, 044-414-1064)

- ◎ [스웨덴 내 코로나19 동향] 2020년 8월 2일 현재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 422명, 사망자는 5,74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함.
 - 인구 대비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786명으로 유럽 내 1위에 해당함(도시국가 제외).
 -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57명으로 유럽 내 5위이며 스칸디나비아 주변국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수준임 (노르웨이 10만 명당 5명, 핀란드 6명, 덴마크 11명. 참고: 한국 0.6명).
- ◎ [대응 및 경과] 스웨덴 정부는 유행 초기부터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며, 시민 책임을 강조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유도함.
 - 유럽의 주변국이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반면, 스웨덴은 식당, 상점, 실내 체육시설 등을 지속 운영하고 휴교도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집단면역’ 실험을 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함.
 - 그러나 스웨덴은 강제성을 띠는 조치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제한된 의료자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자국 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그에 따른 효과도 거둠.
 - 다만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하여 고령 사망자와 요양시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
- ◎ [경제적 영향] 현재까지 스웨덴 경제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작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장기적인 전망은 아직 불투명함.
 - 2020년 1/4분기 유럽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순수출을 제외한 가계소비, 투자 등에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나 주변국과 큰 차이는 없었음.
 - 2020년 경제성장률은 -5.3%로 전망(EU 집행위원회)되며, 5월 실업률도 9%로 증가하여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
- ◎ [시사점] 스웨덴의 전략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 방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봉쇄 없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전략은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이 더 효율적으로 감염확산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스웨덴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단,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여, 자발적 참여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유지, 장소/활동/연령 별 세부 행동 지침 마련,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등 스웨덴 모델의 장점을 참고할 수 있음.
 - 고위험군 보호에 실패하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강문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kangms@kiep.go.kr, 044-414-1204)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mjjeong@kiep.go.kr, 044-414-1225)

문수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shmoon@kiep.go.kr, 044-414-1116)

- ◎ [코로나19 확산 현황] 아프리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8월 4일 기준 약 97만 명)는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남아공에 확진자가 급증하여 8월 4일 기준 52만여 명에 이르며, 북아프리카(이집트 약 9만 5,000명, 알제리 3만 2,000여 명 등)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나이지리아 4만 4,000여 명, 가나 3만 8,000여 명 등)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타 대륙에 비해 적은 검사 건수, 소극적인 역학조사,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 [정부 대응] 아프리카 지역 각국 정부는 2월 말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동 제한, 국경 봉쇄, 각종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음.
 - 각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진단 키트 구매, 보건 및 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을 긴급 투입함.
 - 남아공, 가나, 케냐 등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집단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음.
 - 각국은 기업 지원, 실업자 지원 등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으며, 금리 인하와 세금 감면을 시행함.
- ◎ [사회경제적 영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은 역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및 고용시장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SDGs 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 IMF, AfDB 등은 아프리카 대륙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교육기관 폐쇄로 학교 교육 단절 및 저소득층 학생의 영양실조가 우려되며, 코로나19 외의 보건서비스에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 ◎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 세계은행, IMF, AfDB 등은 아프리카 각국의 부채 상황을 유예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금융을 지원함.
 - 아프리카에서 IMF 긴급금융지원금(Emergency Financing)을 받은 국가는 8월 4일 기준 37개국에 이르며, 기존 보건협력 프로젝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조치가 추가되었음.
- ◎ [전망 및 시사점] 향후 아프리카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송금, FDI, 공적개발원조(ODA) 등 해외자본 유입 감소가 전망되며, 국경 봉쇄로 역내 교역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지역 내 해외 자본 유입 감소로 빈곤율 및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 및 보건 분야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빈곤층 증가와 경제지표 악화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지역간 봉쇄 및 각종 기관 폐쇄 조치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EU 2021~27년 지출예산(MF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 ◎ EU 특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1조 740억 유로(약 1,472조 원) 규모의 2021~27년 다년간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 7,500억 유로(약 1,030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 Next Generation EU)을 조성하기로 합의(2020. 7. 21)
 - 경제회복기금의 운영방식(보조금 vs 대출)을 두고 북유럽 4국(일명 ‘검소한 4국’)이 보조금보다 대출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EU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보조금 규모(5,000억 유로 → 3,900억 유로)를 줄이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
- ◎ [다년간지출예산] 우선순위 조정 및 브렉시트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예산 계획’이라는 평가 속에 디지털 관련 예산(Horizon Europe 및 디지털 유럽)이 EU 집행위원회 초안보다 삭감된 반면, 안보 및 국방 분야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 EU 집행위원회는 예산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자체자원(관세수입, 농산품에 대한 특별관세 등) 및 회원국 부담금 외에 플라스틱세(2021년 1월 1일 발효),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및 금융거래세 등을 도입할 계획임.
- ◎ [경제회복기금]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대출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 [기금 운용] 3,900억 유로의 보조금 및 3,600억 유로의 대출로 회원국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은 기금신청 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기금 지원] 기금 지원은 경제규모가 아닌 코로나19 피해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주요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 [기금 운용 모니터링] 경제회복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EU 정상회의는 3개월 이내에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기금 집행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 ◎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의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었고 △긴축(austerity)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최초의 경제회복기금이 도입되어 △EU 재정 통합의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평가됨.
- ◎ 다년간지출예산과 경제회복기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뒤 2021년 1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나, 유럽의회가 다년간지출예산에 대한 결의안을 발표(2020. 7. 23)하면서 “연구,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예산삭감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최종 승인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주요국 수소전략의 추진 방향과 시사점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044-414-1190)

김중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이보람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brlee@kiep.go.kr, 044-414-1045)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기에너지 저장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소가 저장수단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전 세계에서 5.0%(OECD 국가 7.2%)에 이르며,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EU는 2030년까지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32%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함.
- 재생에너지의 공급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수소가 사용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와 수전해를 통해 얻은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수소경제 생태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유통(저장 및 운송), 활용 측면에 균형 잡힌 성장전략이 필요함.**

- [생산] 석유화학·철강 공정의 부산물로 얻은 부생수소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얻는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를 생성하므로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인 블루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유통] 수소는 질량 에너지 밀도가 유류 및 기타 액화가스에 비해 높으나 체적 에너지 밀도는 낮아 용도에 따라 저장·운송 방식이 달라지며, 수소생산에 지역편중이 있으므로 장거리 운송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활용] 수소는 연료전지의 전기 및 열 생산 기능을 통해 발전하며, 모빌리티, 난방 등에서 활용이 증가할 전망이며,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 친환경 제철 공정 등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음.

◎ **주요국은 현 시점에 갖고 있는 강점에서 시작하여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시간대별 잉여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음.
- 일본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해외의 미이용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조달하는 수소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민주당의 바이든 대선 후보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부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취임 후 4년간 2조 달러)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차 부문의 기술적 선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보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그린뉴딜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수소경제 관련 수출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화웨이 반도체 수출규제 확대와 전망

원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044-414-1022)

- ◎ 2020년 8월 17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재개정을 통해 대(對)화웨이 반도체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음.
 - 미국의 이번 조치는 5월 15일의 규제 강화조치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됨.
 - 1) 화웨이의 해외계열사 38개사를 Entity List에 추가
 - 2) 2019년 5월 이후 90일마다 연장해왔던 화웨이 관련 임시일반허가(Temporary General Licence) 종료
 - 3) 2020년 5월 15일 신규로 추가한 EAR § 736.2(b)(3)(vi)를 재개정하여 규제 적용범위 확대
- ◎ 이번 조치의 목적은 화웨이가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 5월 15일 EAR 개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던 기업은 TSMC였지만, 8월 17일 EAR 재개정을 통한 규제 확대 조치로 인해 화웨이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질 것으로 판단됨.
 - 5월 15일 미국의 제재 강화가 화웨이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8월 17일 규제 강화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수급의 우회로 차단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근본적으로 모든 반도체 생산이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제조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EAR 위반으로 취급되어 미국의 제재를(secondary sanction) 받게 될 수 있음.
 - 이미 확보한 재고 소진 이외에 화웨이가 신규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 ◎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이번 EAR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됨.
 - 무엇보다 화웨이는 이번 미국의 제재 강화로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 화웨이를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의 반도체 관련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
 - 그러나 미국의 조치가 화웨이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오히려 중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반도체 국산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서는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더욱 중요해짐.



국제사회의 SDGs 이행성과와 코로나 이후 한국의 ODA 정책과제

정지선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선임연구원 (jsjeong@kiep.go.kr, 044-414-1078)

유애라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략평가팀 전문연구원 (ailayoo@kiep.go.kr, 044-414-1239)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SDGs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UN의 최근 SDG 이행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전 세계 빈곤인구가 처음으로 증가하여 2020년 극빈층이 7,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최빈개도국과 취약국,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비정규 부문 노동자 실직, 식량불안정과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아동 영양실조,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영세농가 피해, 경제성장 둔화 및 채무건전성 악화, 불평등 및 사회갈등, 여성 대상 폭력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충격으로 빈곤, 기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불평등, 평화 등 SDGs 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의 보건취약성 해소와 경제·사회 복원력 회복, SDGs 이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UN 자문기구 SDSN이 한국을 '코로나 초기대응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OECD 국가'로 평가하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2021년 ODA 예산(요구액 기준)을 4조 793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는 중임.

◎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은 전반적으로 기아, 보건, 산업/인프라, 불평등, 평화/제도구축 등 SDGs 목표 이행을 위한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현재 국가협력전략(CPS) 체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국내 SDGs 이행 차원에서도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및 노인 빈곤, 기후변화 대응 목표가 크게 미달하여 국내전략과 ODA 전략의 정책적 일관성이 개선되어야 함.
- 보건의료시스템 및 역량,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그룹 간 불평등 심화와 취약계층 소외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

◎ 코로나19에 따른 빈곤 심화, 기아, 가치사슬 붕괴, 산업 피해, 실업, 교육·소득·디지털 격차, 취약계층 소외 등 다면적 SDGs 개발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야별 지원(sector-based approach)보다는 다양한 분야·기관·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프로그램형 융합적 ODA가 필요함.

- 2021년 중점협력국 재조정, 제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CPS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취약계층, 젠더, 불평등, 인권 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별 발전단계에 따른 개발여건과 수요 변화에 따라 기존 ODA 지원 유형을 다원화하는 한편, ODA 외에 민간재원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자원 확대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과 시사점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044-414-1095)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놓여 있으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음.

- 2019년 러시아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4.8%로 중국(35.3%), 영국(22.3%), 한국(22.2%) 등에 비해서 낮으나,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2015~19년 평균 성장률은 26.5%로 영국(11.2%), 한국(24.7%), 미국(15.1%) 등보다 높음.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B2C 방식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성장 배경으로 △ICT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자 증가 △경기둔화 장기화에 따른 러시아 소비자들의 보다 저렴한 상품 추구 경향 등을 꼽을 수 있음.
-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B2C 방식 이외에 B2B, B2G 방식의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과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다양한 방식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러시아는 △관련 법제와 세제 도입 △결제 시스템 구축 △물류인프라 개선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음.
- 러시아는 전자상거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54%)가 매우 높아 수입처 다각화와 수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러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절차 간소화 조치 도입 △러시아 기업의 거래계정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턴키방식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안하고 있음.

◎ 러시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은 일본, 중국, 터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미쓰비시는 자동차 판매 플랫폼 확장사업에, 일본 우체국은 일본 제품 전용 인터넷쇼핑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였음.
-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 사회망서비스, 게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익스프레스러시아 합작기업 설립에 참여하였음.
- 터키의 헵시브라다, 질란그룹 등이 러시아에 진출했으며, 한국은 터키의 N11.com과 함께 러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최근 안텍스머니가 전자결제 부문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음.

◎ 향후 한국과 러시아 간 전자상거래 부문 협력은 러시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및 제도 개발 △B2B 시장 활성화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일반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의 부문에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임.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장 (jymoon@kiep.go.kr, 044-414-1274)

나승권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skna@kiep.go.kr, 044-414-1130)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044-414-1234)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044-414-1037)

◎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 또는 탄소중립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EU는 ‘유럽 그린딜’(19년 발표)을 통해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관련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의 경우 2019년 ‘그린뉴딜 결의안’이 부결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2020년 대선 의제 중 하나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됨.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2020년 말까지 제출할 예정임.
-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표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수송 △순환경제 등으로,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가 친환경적인 투자로 분석되었으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에 주목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사업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주요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수송] 배터리 및 수소연료 활용과 관련한 기술표준·규제 정책에서의 국제공조 노력이 필요하며, 수송서비스 통합운영 모델 개발 등 전반적인 수송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정책 지원 및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순환경제] 폐기물 저감·관리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개발, 제품설계, 생산, 소비, 재사용·재활용 등 각 단계마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판 그린뉴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자원 조성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그린 융·복합 확대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자원 조성]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가장 앞서고 있는 EU와 협력하여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 참여 활성화] EU 등을 참고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 근로자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 [디지털-그린 융·복합 확대] 수송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 그린 빌딩 관련 디지털 기술, 제품의 탄소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분야의 발굴이 필요함.
-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 국내 중심으로 제시된 전략을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차원에서 검토하고,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미·중 간 쟁점 사안별 G7 각국의 對中정책 대응과 시사점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044-414-1022)

- ◎ 미·중 간 최근 쟁점 사안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 「홍콩보안법」 △ 신장위구르 △ 남중국해 △ 화웨이 5G 장비 △ 투자심사 강화 △ 사이버 보안
- ◎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중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최근 G7 국가의 대(對)중국 인식 악화와 함께 대중정책의 방향이 선회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장위구르의 인권문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리고 「홍콩보안법」 제정과 같은 중국의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자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외 G7 국가들은 그간 인권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중시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더불어 마스크·백신 외교를 통한 세력 확대 및 체제 선전으로 인해 중국정부에 대한 우려와 불신, 반감이 상승하고 있음.
- ◎ 향후 미·중 간 비경제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의 경우 당분간은 소수의 개인 및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당분간 미·중 간 갈등은 인권·가치·체제·군사 등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큼.
- ◎ 중국의 대응 강도가 쟁점 사안별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이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 및 틱톡·위챗 제재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정부가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우리의 원칙으로 삼고 중국의 시장 개방 및 불공정한 경제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및 주요 공약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044-414-1099)

김중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044-414-1193)

임지운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wrim@kiep.go.kr, 044-414-1273)

- ◎ 2020년 2월 3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경선과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쳐 조 바이든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
- ◎ 현재까지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9월 6일 기준)를 살펴보면 바이든(49.7%)이 트럼프 대통령(42.8%)을 계속해서 앞서나가고 있으나, 지난 6월 결과(10.2%p)에 비해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음.
- ◎ 남은 기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 가능성,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선호도 상승, 전면 우편투표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상정책]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전략으로 요약되는 대중 통상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 [경제정책]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 인상(현 21%→ 28%) 및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한 조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재건을 위해 현재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안과는 별도로 7,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리쇼어링, 연구개발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타 정책]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확대와 오바마케어의 확대 및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내세우고 있음. 이민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양한 이민자 보호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정책과 관련해서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 2020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중 압박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비해 미·중 간 선택을 더욱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및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또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과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공약인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정동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dyjeong@kiep.go.kr, 044-414-1167)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044-414-1124)

- ◎ [코로나19 확산 현황] 1차 봉쇄조치 완화 후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6월 말~7월 초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을 기록했으나, 방역조치 재도입 등을 통해 7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주변국 대비 낮고, 키르기스공화국은 확진자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임.
 -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조지아가 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반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그중 아르메니아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음.
- ◎ [경제적 영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서비스 생산, 교역, 국내 소비 등이 위축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공화국이 2020년 상반기 각각 -1.8%, -5.3% 역성장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은 서비스업·건설업·도소매·농업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코카서스 지역은 2/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2020년 상반기 -2~-5.8%의 역성장을 기록함.
 -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원수출국인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충격을,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스공화국·아르메니아·조지아는 러시아 경기 둔화에 따른 송금액 감소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 [대응방안] 각국 정부는 확진자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특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 부문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납부기한 연장, 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등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를 인하함.
 -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실업과 소득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금지원과 더불어 연금, 육아지원금, 각종 보조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 상한제 도입, 공공요금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 [전망 및 시사점] 2020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며, 2021년은 주변국의 경기회복과 경제 활동 재개에 힘입어 양(+)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자원수출국은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 자원 생산 및 수출 증가를 통해, 키르기스공화국·아르메니아·조지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송금유입액 증가를 통해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방역조치 완화 시 확산이 가속화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보건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과 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 ◎ [선거 결과] 2020년 9월 14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으며, 이를 뒤인 9월 16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내각부 총리로 공식 지명됨.
- ◎ [내각 구성] 스가 총리는 총리 지명 후 곧바로 새로운 내각을 발표하였는데, 코로나19 대응, 아베노믹스, 통상정책 등 아베 전 총리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초를 이어가면서도 행정개혁, 디지털청 신설 등 자신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내각을 구성함.
 - [경제, 외교] 이전 아베 내각에서 경제·외교·산업 등 주요 분야를 담당했던 장관들이 유임되었는데, 이는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기보다는 미완 상태인 이전 내각의 코로나19 대책 및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해나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조개혁] 행정개혁 담당,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장관을 임명한 것은 공약으로 내세운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경제·외교 전망] 주요 경제 및 외교 정책은 한동안 이전 내각의 기초를 유지할 전망이다.
 - [경제] 아베노믹스, 재정건전화, 통상정책 등 이전 아베 내각 당시 추진되던 경제정책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완화,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외교] 아베 내각의 외교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권 초기에는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스가 총리의 외교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 [한일 관계]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경제회복 등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권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여지는 부족해 보임. 그러나 일본 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하여 스가 총리가 재집권한다면 안정된 정치 기반을 토대로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및 시사점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 ◎ 뉴질랜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봉쇄조치 실시로 낮은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효과적인 방역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2020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 경제는 3~4월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로 내수 악화가 이어져 1/4~2/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뉴질랜드는 경제성장률이 1/4분기 -1.6%(전기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도 -12.2%로 나타남.
 - 엄격한 뉴질랜드의 방역기조로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되었으나,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9월 21일 기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인구 백만 명당)는 각각 363명, 5명(확진자 수 기준)을 기록함.
 - 뉴질랜드는 2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1,400여 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3월 말 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확진자 수가 감소함.
- ◎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배경으로는 △선제적 방역조치 △적극적인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도와 정부의 리더십 △고립된 지리적 특성이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상황 속에도 2월부터 신속하게 해외 입국을 제한하였으며,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4일 만에 경보 시스템을 2단계에서 최고 4단계까지 격상하는 등 강력한 국내 봉쇄조치를 실시함.
 - 뉴질랜드 정부는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접촉자 추적·격리 조치를 시행함.
 - 정부는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 전달 방식의 리더십하에 국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음.
 - 뉴질랜드의 섬나라라는 지리적 고립성이 코로나19 방역에 유리하게 작용함.
- ◎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적극적인 협조가 봉쇄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뉴질랜드는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이재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044-414-1134)

- ◎ 태국은 1월 13일 중국 외 지역 최초로 코로나19가 발생했으나, 강력한 방역정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입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함.
 - 태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3월부터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했으며, 5월부터는 국내 확진자가 빠르게 감소해 5월 23일~9월 3일 약 100일간 국내 전파자 0명을 기록함.
 - 9월 4일 국내 전파자 1명 발생 후 9월 22일까지의 추가 확진자는 전원 해외 입국자이며, 확진자 3,506명, 사망자 59명, 완치율 98.26%, 사망률 1.74%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
- ◎ 코로나19 발생으로 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1/4분기 -2.0%, 2/4분기 -12.2%를 기록해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함.
 - 태국 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1/4분기 2.7%로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본격화된 2/4분기에는 -6.6%로 크게 감소했으며 투자 및 교역도 마이너스 성장함.
 - 2/4분기 업종별로는 농업(-3.2%)보다 비(非)농업(-12.9%)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제조업(-14.4%), 숙박·식음료(-50.2%), 운송·창고(-38.9%) 등의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두드러짐.
- ◎ 태국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통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3차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적인 충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음.
 - 태국정부는 3월 26일 국가비상사태 발령 후 외국인 입국 제한, 국내 이동 제한, 34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폐쇄 등 강력한 방역정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입어 9월 초까지 약 100일간 국내 코로나19 전파자를 0명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함.
 - 태국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하(1.25% → 0.50%), 3차에 걸친 대규모 경기 부양책(약 2조 5,000억 바트, 약 772억 달러, GDP 대비 약 14%) 등을 실시함.
- ◎ 한·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보와 노하우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은 태국의 경제개발 전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요를 감안해 디지털 및 미래형 산업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비시장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의 배경과 시사점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 kang@kiep.go.kr, 044-414-1196)

- ◎ 2020년 7월 1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프로판올에 대한 덤핑예비판정에서 미국의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에 ‘비시장상황(非市场状况)’이 있다고 판단함.
 - 중국 조사당국은 미국이 자원 관리, 수출입 통제,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입법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전력 등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비시장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중국 조사당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및 전력을 주요 생산요소로 하는 에틸렌, 합성가스, 수소 등의 원가 및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제품을 원료로 제조하는 미국산 프로판올의 원가에도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함.
- ◎ 중국은 미국 및 EU의 개정반덤핑법과 유사한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에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함.
 - 미국은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보아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을 발효하여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 Adverse Facts Available)’의 적용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한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있다고 볼 경우 정상가격을 산정시 특별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내수가격 및 원가를 배제하는 재량권을 강화함.
 - EU는 2017년 말 개정반덤핑법을 발효하면서 ‘중대한 왜곡’이 있을 경우 제3국의 대표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관련한 덤핑사건에서 해당 분야에 ‘중대한 왜곡’이 있다고 보아 중국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이 아니라 제3국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해왔음.
 - 중국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에서 ‘이용가능한 사실(FA: 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며, 미국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보고 정상가격 구성 시 수출기업이 제출한 원가 및 가격을 활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대의 높은 덤핑마진율을 책정함.
- ◎ 중국이 미국 내 비시장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 덤핑예비판정이 처음이며, 중국이 덤핑조사에 있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활용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미국산 폴리페닐에테르에 대해서도 비시장상황을 이유로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다른 미국산 석유화학제품에도 동일한 판단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이 비시장상황 등의 조사기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독일 통일 30년: 경제통합의 성과와 과제

정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044-414-1127)

- ◎ 2020년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날임. 지난 30년간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소득은 서독의 85% 수준에 이르렀고, 실업률 또한 양 지역의 격차가 크지 않은 수준에 도달함.
 - 독일의 흡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정부가 2조 유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며, 통합 과정에서 일부 정책상의 실수로 현재까지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통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해야 함.
- ◎ 값비싼 대가를 통한 성공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동서독의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어, 동독 연방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
 -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여전히 정주여건, 전문인력 수급, 임금과 노동생산성 등 투자환경이 취약함.
 - 동독 산업구조상 부가가치 창출이 높지 않고, 제조업 노동자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은 서독의 절반 수준임.
 - 독일의 30대 대기업 중 동독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없고, 500대 기업 중 동독에 본사를 둔 기업은 36개 사에 불과하며, 정부부처와 정부지원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독에 위치해 있음.
 - 동독의 세수입 역시 서독 대비 55% 수준이며, 법인세도 서독의 52% 수준에 그침.
 - 혁신과 기술진보, 경영진의 능력 등과 같은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이 서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재들은 여전히 서독으로 지속 이주하는 상황임.
 - 향후 동독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독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인재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 설립 및 공공 연구기관 육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개방적 정책, 동독의 도시경쟁력 확보 등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투자 대상지로서 대(對)서독 비교우위를 이루어내야 함.
- ◎ 독일 방식의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 양측이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명목GDP 기준 세계 12위인 남한과 117위인 북한,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세계 25위인 남한과 세계 180위인 북한이 독일식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함.
- ◎ 남북이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여 북한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8년 남북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 1인당 GDP의 80%에 도달하기까지 연간 8%의 성장을 격차로 3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결국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이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관건임.
 - 다만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도 북핵문제 해결,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통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투자유치를 위한 혁신적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임.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044-414-1221)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044-414-1226)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gyoon@kiep.go.kr, 044-414-1064)

◎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 한국정부도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을 핵심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음.

-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환경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세부 정책이나 장기적인 로드맵은 차이가 있음.

◎ 유럽 그린딜과 한국 그린뉴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존에 추진되던 기후변화 정책과 환경정책을 보완·확대하였으며,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수행해야 할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함.

- [한국 그린뉴딜] 한국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함.

◎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럽 그린딜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탄소중립 목표시한 설정] ‘탄소중립 목표시한’을 포함하여 더 과감하고 뚜렷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제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 관련 정책을 그린뉴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들은 그린뉴딜과 연계하여 추진할 여지가 있음.

- [공정전환] 녹색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사회구성원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책 지원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인 ‘안전망 강화’ 분야에 공정전환 관련 목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국제협력] 외교, 무역, 개발협력 분야를 환경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산업 차원의 기술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해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044-414-1156)

-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인 양당제도 및 선거인단 독식제도로 인해 10개 미만 경합 주(州)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 지난 30년간의 미 대선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 지지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이에 소위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일부 주와 핵심 경합 주의 선거 결과가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
 - 아울러 선거 당해의 1인당 GDP 등 경제상황의 호전이 현직 또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음.
- ◎ 2016년의 미 대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선거전략에 클린턴 후보의 전략적인 판단 실패가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1% 미만 박빙의 승부에서 패한 것이 클린턴 후보의 대선패배를 확정지었으며, 이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 득표로 연계시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음.
- ◎ 2020년 미 대선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나, 당선에 필요한 결정적 메시지 부재 및 대중 갈등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지층 결집효과 등으로 인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여론조사 결과 격차,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 2018년 중간 선거에서의 민주당 주지사 득세, 우편투표의 상대적인 유리성,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상반기 경제상황의 저조 등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2016년 대선에서 빼앗긴 3개 주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를 위한 바이든 후보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갈등을 활용한 지지도 결집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2016년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민주당 신(新)행정부 출범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비하여 대외 통상정책에서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긴요함.
 -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기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의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044-414-1511)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044-414-1272)

-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0년 8월 28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이하 ‘목록’)」을 조정하여 발표함.
 - 이번 ‘목록’은 △ 기술 수출 관리 규범화 △ 자국 기술 경쟁력 강화 △ 국가안보를 위해 조정되었으며, ‘목록’에 포함된 기술은 향후 수출, 투자, 기술협력 등을 통한 해외이전 시 중국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짐.
- ◎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근거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중국정부는 직접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01조 조사를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MA)」 제정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미국 첨단기술 기업 인수를 규제해오고 있음.
 - 지난 2020년 8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틱톡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임.
 - 이번 ‘목록’ 발표를 통해 중국정부도 미국의 대중 기술분야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 이번에 조정된 ‘목록’은 기존의 수출 제한·금지 항목을 일부 삭제하는 동시에 수출 제한 항목에 첨단기술 항목 23개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기존의 150개에서 164개로 증가됨.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3개 항목은 △ 유전자 공학 △ 3D 프린팅 △ 항공·우주 △ 드론 △ 정보 보안·암호 △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임.
 - 한편 2008년에 발표된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금지 항목 33개, 제한 항목 117개로 총 150개였으며, 이번 2020년 판의 53개 조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기존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됨.
- ◎ 중국정부의 이번 ‘목록’ 발표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응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자국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이전 시 국가안보를 근거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이번 ‘목록’이 바이트댄스(ByteDance)의 틱톡 매각 진행 과정 중에 발표되면서, 중국 당국의 허가 여부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틱톡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 이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현재 바이트댄스는 중국 베이징시 상무국에 기술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중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기업도 이번 ‘목록’에 포함된 기술 도입 및 관련 기업 인수합병 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제도를 예의주시해야 함.
 - 중국으로의 기술 수입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목록’ 발표로 인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한국과의 협력 과제

강문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kangms@kiep.go.kr, 044-414-1204)

- ◎ 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산업인 모바일 금융, 전자상거래, OTT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 아프리카 지역의 데이터 구매 비용이 최근 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물류, 통신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추세임.
 - 전자정부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토지 등록, 선거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련 기반시설 미비로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발생함.
 -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등록률이 40%에 머무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현금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바일머니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교육기관 폐쇄에 따라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이 약한 대다수 농촌 지역 학생들의 비대면 교육 접근성은 매우 낮음.
- ◎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전략 수립을 통해 역내 디지털 무역 확대와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 아프리카연합은 각국이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디지털 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아프리카지역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과 함께 국가간 디지털 무역 과세에 관한 협상이 2021년부터 진행되면 역내 디지털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디지털 분야 인력 육성, 디지털 기반 확충, ODA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융합,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일본 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현지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 보건, 농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결합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한 디지털 기술 및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교육·보건의료·농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타트업 성장,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문해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및 빈곤층 포용, 디지털 신분증 도입, 디지털 기반 확충이 아프리카 모바일 산업 확대와 디지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멕시코의 에너지정책 논쟁 및 시사점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Tel: 044-414-1085)

남지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연구원 (jmnam@kiep.go.kr, Tel: 044-414-1105)

- ◎ 멕시코의 오브라도르(이하 AMLO) 대통령은 2018년 12월 취임 이후 에너지산업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영석유회사 Pemex와 연방전력공사 CFE(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의 역할 및 재무구조 강화를 기반으로 석유 및 전력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AMLO 정부는 Pemex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정유소의 현대화 및 신규 정유소 건설을 통해 정제유 수입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주권을 회복하고자 함.
 - 전력 산업에서는 화석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2012~18년)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산업 개발에 제동을 거는 등 민간부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 페냐 니에토 정부는 에너지 개혁법을 제정하여 석유 및 전력 산업을 민간부문에 개방했음.
 - 에너지 개혁의 주된 목적은 Pemex와 CFE가 독점하던 석유 및 전력 산업을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촉진 등이었음.
 - 그러나 AMLO 대통령은 에너지 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정체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개혁 이전으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음.
- ◎ AMLO 정부의 민간부문 에너지산업 참여 제한은 대(對)멕시코 투자심리 위축을 야기함.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민간 투자유인은 감소하고, 전반적인 투자환경도 악화되고 있음.
- ◎ 소비자 편의 및 에너지산업 주권 강화를 강조하는 AMLO의 에너지정책은 국가·투자자 분쟁과 외국 정부의 간여를 야기하는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음.
 -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멕시코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양국 관계에서 에너지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으로 기업에 부담이 작은 재정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삼성엔지니어링의 정유공장 건설사업 수주 사례처럼 멕시코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에는 호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강구상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gskang@kiep.go.kr, 044-414-1099)

- ◎ 2020년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셉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11월 6일(한국시간) 현재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네바다주 선거인단 6명까지 확보하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체제를 통해 통상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WTO]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혁신 촉진, 디지털무역 이슈 등 변화된 국제 통상환경 질서를 다룰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WTO 체제개혁을 추진할 전망
 - [CPTPP] 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
 - [대중국 통상정책]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글로벌 공급망 의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 바이든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및 세제개편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 [재정정책] 바이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와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상 및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리쇼어링 정책]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에 징벌적 세금 부과방식을 적극 활용할 전망
- ◎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필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마련
 - WTO 구조개혁 관련 주요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 정립
 -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021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책임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sungbae@kiep.go.kr, 044-414-1190)

◎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전망치 대비 10.1%p 상승한 5.0%의 성장률(PPP 환율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백신 개발·보급 지연 및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괴리 등이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 주요 선진국은 2020년 3/4분기 이후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는 못할 전망

- 미국은 큰 폭의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2021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 지역과 영국은 재정지출의 확대와 수출의 일부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다소 회복하면서 각각 2020년 대비 13.7%p 상승한 3.7%와 17.3%p 상승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일본은 소비활동의 제한이 점차 줄어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으로 2020년 대비 7.8%p 상승한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경우 성장률 둔화추세가 완화되거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투자자 소비 회복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환 등 긍정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성장경로에 근접하여 2020년 대비 6.2%p 상승한 8.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인도는 전년도 기록적인 경제규모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9.0%p 상승한 9.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세안 5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20년 대비 9.0%p 상승한 5.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고 국제유가 급락 등 부정적인 대외충격이 없을 경우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V자형 회복경로를 보이면서 2020년 대비 7.7%p 상승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경기부양책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0년 대비 8.4%p 상승한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EU 신(新)이민·난민 협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이현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044-414-1226)

- ◎ EU로의 이민 유입 확대에 EU 공동의 효과적인 이민·난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23일 신(新)이민·난민 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발표함.
 - EU에 거주하고 있는 역외 외국인(EU 회원국이 아닌 국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EU 전체 인구의 약 4.6%로 2014년 대비 0.8%p 상승함.
- ◎ 협정안의 목적은 절차를 개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역외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 △이민, 난민, 이민자의 사회 통합, 국경관리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IT 기술과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불법입국 경로를 줄이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의무적이지만 유연한 기여 체제를 도입하여 회원국간의 공평하고 균형적인 책임 배분과 지속적인 연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밀입국 대응, 난민 지원, 합법적 이민 관리 등을 위해 역외국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 협정안의 내용은 △이민·난민 관리를 위한 공동 체제 형성 △강력한 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 △통합된 국경 관리 △밀입국 대응 강화 △역외 협력 △기술 및 인재 유치 △포용적 사회를 위한 통합 지원으로 구성됨.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까지 협정안 관련 파생 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임.
- ◎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난민을 보호할 방안이 미비하고, 합법적 이주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며, 역내 연대 강화가 난민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 ◎ EU 차원의 이민·난민 정책은 회원국간 만장일치가 필요한 분야로, 비세그라드 4국의 강한 반대로 인해 협정안 전체가 원안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EU의 양대 축인 독일(유럽 이사회의 2020년 하반기 의장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유입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협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반면, 헝가리를 필두로 폴란드, 체코 등은 난민 수용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합의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정책 일부만 포함하는 협정안의 부분적인 채택 가능성은 있음.
- ◎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선제적인 대비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044-414-1284)

최원석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wschoi@kiep.go.kr, 044-414-1048)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044-414-1189)

이효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044-414-1057)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044-414-1203)

- ◎ 19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 이하 건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주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 현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키워 혁신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 <14.5 계획> 기간(2021~25) GDP 성장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5~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의 2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년 동안(2021~35)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 ◎ <14.5 계획>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미·중 갈등에 정면과 지구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주화와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주도 성장’을 <14.5 계획>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추진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할 계획임.
 -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제조 2025’ 대신 이와 유사한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계획이 제시되었으며, 국가 안보와 관련성이 큰 항공우주와 해양설비 분야가 새롭게 강조됨.
 - 이 외에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디지털 경제 전환과 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중국 경제산업을 고도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임.
- ◎ <14.5 계획> 기간 중국 경제·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 관광·문화콘텐츠·의료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단기적으로 핵심 부품(반도체 등) 및 중간재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한·중 협력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한 한·중 간 비교우위 축소,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 심화 등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여 역내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와 지역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익과 원칙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시사점

장영욱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ojang@kiep.go.kr, 044-414-1221)

- ◎ 2020년 여름을 전후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9~10월부터 다시 심화되고 있음.
 - 이번 2차 유행 시 일일 최대 확진자 수는 약 28만 명으로 1차 유행 때의 8배 이상이며, 일일 최대 사망자 수는 4,900여 명으로 1차 유행(4,100명)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1차 유행 시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증했고, 1차 유행 당시 피해가 적었던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이번 재확산을 피하지 못함.
- ◎ 재확산의 원인으로는 겨울철 기온 하락, 거리두기 완화, 통제정책에 대한 순응도 감소 등을 꼽을 수 있음.
 - 겨울철 기온 하락에 더하여, 1차 유행 이후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시민 활동량이 증가한 점과 경제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봉쇄 재도입이 늦어진 점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주었음.
 - 사망자가 증가하자 유럽 주요국에서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동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통제조치를 다시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음.
- ◎ 유럽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된 3/4분기에 반등했으나, 가을철 재유행과 봉쇄조치 도입으로 인해 4/4분기 및 2021년 경제전망은 밝지 않음.
 -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고용시장 불안정, 소득 감소,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따라 2021년에도 유행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단,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조기에 통제하고 백신이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공급될 경우 2021년 상반기부터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 방역 대응의 강도가 높을수록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겠지만,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도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유행 초기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통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단, 강압에 의한 장기간의 통제는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떨어지므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는 피해를 정확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통제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이에 더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감염 확산이 악화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보호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오수현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shoh@kiep.go.kr, 044-414-1186)

라미령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장 (mrma@kiep.go.kr, 044-414-1054)

연원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whyeon@kiep.go.kr, 044-414-1022)

- ◎ 2020년 11월 15일 RCEP 정상회의에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RCEP 협정을 타결하고 정식 서명하였음.
 - RCEP은 2011년 ASEAN이 인도를 포함한 ASEAN+6 체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인도가 2019년 불참을 선언하여 15개국간 협정으로 타결됨.
 -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ASEAN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ASEAN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야 함.
- ◎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20개 장으로 구성됨.
 - [상품] 상품 관세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약 92%임.
 - [서비스] 서비스 교역 개방 방식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발효 3년 이내(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12년 이내)에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무로 규정함.
 - [원산지규정] i) 원산지 증명 시 기관뿐 아니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 ii)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
 - [전자상거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무역원활화 조항과 국경간 전자상거래 증진 조항 (컴퓨터 설비의 위치, 데이터 국경간 이전 관련 조항)을 포함함.
 - [정부조달] 정부조달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속서에서 각국의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를 공표
- ◎ RCEP 타결의 가장 큰 의의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세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이며, RCEP은 앞으로 회원국간의 교역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임.
 - RCEP을 통해 ASEAN 지역에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협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일본, 일본·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중·일 FTA 진전의 발판이 됨.
 - 우리나라는 RCEP 가입을 통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향후 형성되거나 RCEP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메가 FTA에 대한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임.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ysjang@kiep.go.kr, Tel: 044-414-1263)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연구원 (ebpark@kiep.go.kr, Tel: 044-414-1046)

- ◎ 제27차 APEC 정상회의가 2020년 11월 20일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라는 주제로 올해의 APEC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 APEC 역사상 최초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APEC 21개 회원국 모두 참석함.
-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침체된 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 공조를 지속하기로 함.
 - APEC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 필수품 교역 촉진을 위한 관세 감면 △ 코로나19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코로나 대응을 위한 APEC 서브펀드 설립 △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등을 제안함.
- ◎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는 2017년 이후 3년 만에 정상선언문이 채택된 점과 APEC 회원국이 204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20 쿠알라룸푸르 정상선언문’에는 △ 코로나19 대응 및 충격 완화를 위한 회원국의 협력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 APEC 관련 이해관계자[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등]와의 연계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됨.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포함된 핵심 요소로는 ① 무역투자 담론 개선 ②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경제 참여 ③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성 추진 등이 있음.
- ◎ 2021년도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는 내년도 주제를 ‘Join, Work, Grow Together’로 선정하고, 3대 핵심 의제로 △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 △ 장기적 차원에서 포용적·지속가능 회복 △ 디지털 회복을 제시 하였음.
 - 2021년에도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될 것을 예상되므로 APEC 포라(for) 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논의와 역내 협력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APEC의 핵심 가치인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 변화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이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APEC의 주제와 핵심 의제에 포함되고 있는 ‘디지털’ 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확산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파생상품 시장 현황 및 최근 한국의 이슈

김유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yrkim@kiep.go.kr, 044-414-1326)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044-414-1214)

- ◎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통화,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금융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계약 형태와 기초자산의 유형, 그리고 거래 방법에 따라 구분됨.
-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등의 지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결정된 방법에 따라 금전의 지급 혹은 회수가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임.
 - 파생결합증권은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주식과 같은 개별 기초자산 대비 위험성이 낮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다양한 구조로 발행이 가능하여 선호도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 2010년 이후 장내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동 기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세계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이자율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세계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임.
- ◎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대비 파생결합증권 거래 규모 비중이 높은 편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는 201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1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 투자자들의 파생결합증권 투자가 급증하게 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급증한 데 기인함.
 - 최근 주요국의 금리하락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마진콜에 따른 외화수요가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
- ◎ 최근 미국과 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
 - 소 상품은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적용된 상품이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상품으로 불완전판매된 경우임.
-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의 주가지수 급락으로 인해 ELS·DLS 자체 헤지 규모가 큰 증권사에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기금리 및 환율 급등, 채권가격 급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함.
 - 과거에는 증권사들이 주로 백투백 헤지로 위험을 회피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헤지 비중을 늘려왔음.
 -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외화수요가 급증하면서 단기금리 및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함.
- ◎ 정부 및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은 진정되었으나, 향후 금융불안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증권사 마진콜 사태에 따른 외화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ysjeong@kiep.go.kr, 044-414-1141)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044-414-1230)
이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unhyunglee@kiep.go.kr, 044-414-1070)
김혁황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hkim@kiep.go.kr, 044-414-1135)
양다영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위원 (dyyang@kiep.go.kr, 044-414-1223)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위원 (jegook@kiep.go.kr, 044-414-1039)
강민지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위원 (mjkgang@kiep.go.kr, 044-414-1196)

◎ **미 재무부는 2020년 12월 16일 베트남을 「교역촉진법(2015)」상 심층분석 대상국 및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

- 베트남은 「교역촉진법(2015)」 제정 이후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되었으며,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한 「종합무역법(1988)」상 환율조작국에도 해당한다고 평가됨.
- 대미 무역흑자 확대,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불법 우회 수출 가능성,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이 지정 배경임.

◎ **미국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은 베트남의 환율, 교역,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동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향후 베트남 통화 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 * IMF는 8.4% 저평가된 것으로 보며, 본 연구에서는 1.5~2.8%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관세법(1930)」 또는 「무역법(1974)」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향후 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환율보조금 상계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기업의 대(對)베트남 투자 시 미국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금융지원이 금지될 경우 미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에도 일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베트남 통화 가치 절상 등으로 베트남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본 연구에서 베트남 및 한국의 수출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베트남의 대미국 수출은 25.4억~37.6억 달러 (2017~19년 평균 대비 4.4~6.5%),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2.2억~3.3억 달러(0.45~0.68%) 감소하고,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정밀 기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트남 내 현지 한국계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 약화 등으로 이들 기업의 현지 생산, 해외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 *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2020년 11월 10일 미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베트남산 타이어의 상계관세가 금호타이어 10.08%, Sailun(중국기업) 6.23%, 기타 6.77% 부과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의 교역과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통화 가치 저평가에 따른 상계·보복 관세의 불뚱이 한국으로 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대북관광 동향과 시사점

이정균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044-414-1084)

-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제재 상황에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 특구(원산-갈마 지구, 삼지연 지구 등) 건설에 박차
 - 북한은 과거 관광을 체제선전,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실리 추구’로 인식 전환을 하고 외화 획득 사업으로 중점 육성
 - 2019년 역대 최대인 약 26~3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코로나19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외국인 관광이 중단
- ◎ 북·중 관광 교류는 제재 가운데서 오히려 확대되었음.
 - 강화된 대북 제재 이후 중국의 대북 관광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교통수단과 대금 지급 방식 등의 제재 저축 여부가 쟁점화 되면서 북한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대북 관광이 북·중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부상
 -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 방북 이후 중국인 대북 관광이 급증하였는데, 대북 관광객의 90%가 중국인
- ◎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사례, 특히 중국, 베트남의 경험과 성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 중국, 베트남 등 체제 전환국은 개혁·개방 초기 개발구 건설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
 - 제1·2차 북미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김정은은 현지 관광시설 위주로 방문
- ◎ 코로나19 국면 해결 시 대북 관광을 중심으로 북·중 협력이 강화·재개될 것으로 전망
 - 대북 관광 재개 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중단 장기화 우려
- ◎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발표 이후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남·북·중 다자간 관광 협력으로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
 - 다만, 대북 개별 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 관광 정책과 중국의 대북 관광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북 당국의 우선적인 협의와 한·중 당국 간 협의, 국내 제도 개선 등의 병행이 필요
 - 외국인 유치 및 인재 육성 등 남북 관광 협력 강화, 지자체 주도의 남북 관광사업 추진, 다자간 관광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적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unhyunglee@kiep.go.kr, 044-414-1070)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 ◎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이후, 중국이 5월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으로 보리·석탄·와인·구리 등 수입 제재를 확대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이 대호주 수입 제재 품목을 확대하자 호주는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통상마찰로 커지고 있음.
 - 통상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중국이 자국민에게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 최근 호주·중국 간 갈등 이후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호주와의 마찰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옴.
 - 2020년 5월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소고기와 보리의 5~10월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함.
 - 중국정부가 6월에 자국민의 호주 방문 자제를 권고한 이후, 5~10월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2.1%p 감소하여 26.2%를 기록함.
 - 철광석 가격은 4월 말 기준 톤당 83.5미달러에서 12월 18일 기준 161.5미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함.
- ◎ 호주를 상대로 한 중국의 전방위적 조치는 중국에 맞서는 국가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 관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갈등의 국제화로 번질 가능성도 있음.
 -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는 최근 ‘공급망 복원 구상(SCRI)’이라는 협력체를 만들어 일본·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소속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이번 호주·중국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2020년 6월에 설립된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는 호주를 비롯한 19개국이 중국과의 갈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안보·경제 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동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팀장 (dhjoe@kiep.go.kr, 044-414-1123)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044-414-1159)

윤형준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hgyoon@kiep.go.kr, 044-414-1064)

- ◎ [협상 경과]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
 - 영국은 2020년 초 EU를 탈퇴하였으나,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기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지속되는 이행기(transition period)임.
 - 2021년 1월 1일부터 TCA가 잠정 발효되고, 북아일랜드·EU 간 교역에는 TCA 미적용(탈퇴협정 적용) 예정
- ◎ [TCA의 무역 관련 주요 특징] △무관세·무쿼터 유지 △전자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 점진적 강화 △영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EU 시장 접근을 허용하던 패스포팅 권한 종료
 - TCA의 원산지 기준은 전자자동차·배터리의 역내산 인정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역내 생산을 유도
 - 영국기업이 EU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과 달리 대상 국가별·업종별 제약이 적용됨.
- ◎ [쟁점에 대한 합의] △[어획량] 향후 5.5년은 조정기간, 이후 매년 협상 △[공정한 경쟁 환경] 노동·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기준을 기존(EU 체제 하)보다 낮추지 않고, 보조금에 관한 원칙 준수 △[거버넌스] 분쟁 발생 시 독립적인 중재 재판을 통하여 해결
 -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어획량과 관련하여 영국 해역 내 EU의 어획량을 조정기간 동안은 현재의 75% 수준으로 조절
 - EU는 '영국이 EU의 보조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련의 원칙에 합의하는 데 그침.
 -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방의 사법권(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은 인정되지 않음.
- ◎ [시사점] EU·영국 양측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래 4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종식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
 - 그러나 브렉시트 전 대비 EU·영국 간 상품무역 및 영국 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
 - 이행기 종료 즉시 한·영 FTA가 발효되는 만큼 한국에 급작스러운 영향은 없을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친환경 자동차·배터리 생산 역내화, 영·EU 간 공급망 재편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